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목 차

■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ecutive Summary	i
1. 트럼프 행정부 출범	1
2.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과 보호무역 현황	3
3.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8
4. 시사점	11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정 민 연 구 위 원 (2072-6220, chungm@hri.co.kr)

 조 규 립 연 구 위 원 (2072-6240, jogyurim@hri.co.kr)

 오 준 범 선 임 연 구 원 (2072-6247, jboh19@hri.co.kr)

Executive Summary

□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 행정부 출범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는 제 45대 대통령 취임선서와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트럼프의 초대 내각은 현역의원, 관료, 월가 출신 등 각계 인사가 내정되었고, 강경파 예비역 장성 출신들이 안보라인에 등용되었다. 특히, 통상정책을 담당할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등의 내정자들은 중국 강경파이자, 미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과 보호무역 현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미국에 이익을 우선시 하는 무역협정 체결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2015년에는 -7,52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보호무역 대상국으로 언급된 중국과 멕시코의 무역적자 비중이 2010년 53.4%에서 2015년 56.0%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의 공공부채는 2010년대 들어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20년까지 16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위기 이후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축소되었으나, 2016년 이후 축소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였으나, 이들 대상국 가와의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인 자유무역을 추진한 결과 총 14개, 20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였다. 하지만 자유무역발효 이후, 2016년 달러가치 기준으로 미국은 NAFTA에서 2조 2,500억 달러, 이스라엘 FTA 1,500억 달러, 한국 FTA에서 1,100억 달러의 실질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셋째, **미국은 자유무역 추진과 환율 조작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평가,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하고 있다. 2016년 10월 환율 조작국 평가에서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노동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과 노동시장참가율이 함께 낮아지는 현상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도 크게 감소했다.

또한,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보호무역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 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對세계 무역보호 조치는 클린턴 대통령 시기(1992~1999년) 1,052건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

기(2008~2016년) 3,746건으로 약 3.5배 증가하였으며, 2008~2016년 기준으로 전체 보호무역 조치 중 위생 및 검역(SPS)과 기술장벽(TBT) 조치는 각각 36.6%, 42.9%를 차지한다. 또한 미국의 對세계 보호무역 조치 중 중국에 해당하는 비중은 1992~1999년 75.0%, 2000~2007년 87.3%, 2008~2016년 90.8%로 증가하였고, 한국에 해당하는 비중도 1992~1999년 73.2%, 2000~2007년 84.5%, 2008~2016년 86.3%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의 對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대상으로 보면 보호무역 조치가 1992~1999년에서 2008~2016년까지 약 20배 이상 증가했다.

■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면, 한미FTA 폐기 및 재협상,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예상되며,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및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미FTA 폐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1억 달러, 총고용감소분은 약 12.7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하며, 이는 2016년 한국의 對중 수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8.7억 달러 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2017~2020년 대미 수출 손실액 및 국내 고용감소분 추정 결과 >

구분	대미 수출 손실액 추정치	국내 고용 감소분 추정치
2017년	30.9억 달러	3.0만 명
2018년	32.0억 달러	3.1만 명
2019년	33.1억 달러	3.2만 명
2020년	34.2억 달러	3.3만 명
합 계	130.1억 달러	12.7만 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소수점 2자리 이후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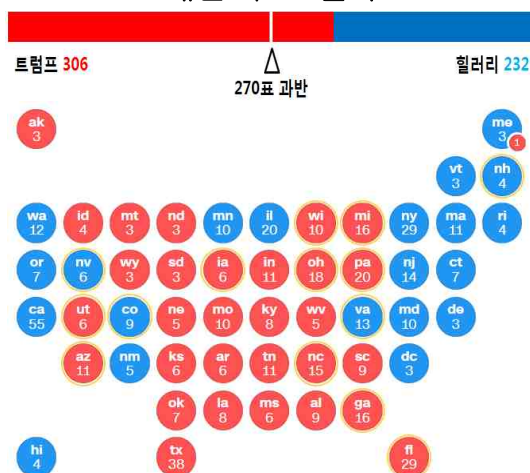
자국우선주의, 반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취임 후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트럼프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한미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1. 트럼프 행정부 출범

○ (개요) 도널드 트럼프는 2017년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와 동시에 임기가 시작

- 2016년 11월 8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 도널드 트럼프는 총 선거인단 538명 중 306명을 확보하여 232명 확보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승리를 거둠
 - 2016년 12월 19일 선거인단의 투표 후, 상하 양원 앞에 개표와 공표의 형식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7년 1월 20일에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 예정
-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
 - 정원 100명 중 34명을 새로 선출하는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12석, 공화당 22석을 확보했고, 전체적으로 공화당 52석, 민주당 48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 유지
 -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교체하는 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241석을 확보한 반면 민주당은 194석을 확보

< 대선 투표 결과 >



자료 : CNN.

< 상·하원 투표 결과 >

구분	공화당	민주당	계
상원	52	48	100
하원	241	194	435

자료 : CNN.

- (트럼프 행정부 구성) 트럼프의 초대 내각은 현역 의원, 관료, 월가 출신 등 각계 인사가 내정되었으며, 강경파 예비역 장성 출신들이 안보라인에 등용
 - 렉스 틸러슨, 스티븐 므누신 등 국정 운영에 경험이 없는 내정자도 다수 존재
 - 특히, 통상정책을 담당할 상무 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회 내정자들은 중국 강경파이자 미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산될 전망
 - 상무 장관 내정자인 윌버 로스는 무역 협상이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미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고 강조
 -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 대표 내정자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무역 관련 업무 소송 및 협상가임
 -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피터 나바로 교수는 대중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인물
- 본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트럼프 행정부 구성 >

국무장관	재무장관	내무장관	국가경제위원장	UN 대사	대통령실
렉스 틸러슨 (Rex Tillerson) 前 엑손모빌 CEO	스티븐 므누신 (Steven Mnuchin) 前 골드만삭스 임원	라이언 징크 (Ryan Zinke) 하원의원	개리 콘 (Gary Cohn) 골드만삭스 사장	니키 헤일리 (Nikki R. Haley) 주지사	-백악관 비서실장 :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마이클 플린 -백악관 수석전략가 : 스티브 배넌 -국가무역위원회 : 피터 나바로 -규제완화 특별자문 : 칼 아이칸 -선임고문 :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대변인 : 손 스파이서 -백악관 법률 고문 : 도널드 맥칸
국토안보장관	노동장관	주택장관	중앙정보국	중소기업청장	
존 켈리 (John Kelly) 前 사령관	앤드루 퍼즈더 (Andrew Puzder) CKE식당체인 CEO	벤 카슨 (Ben Carson) 의사 출신	마이크 폼페오 (Mike Pompeo) 하원의원	린다 맥마혼 (Linda McMahon) VWVE 공동소유자	
교육장관	상무장관	법무장관	국가정보국장	무역대표부	
벤티 디보스 (Betsy DeVos) 교육 활동가	윌버 로스 (Wilbur Ross) 윌버 로스 & 로먼 패니 회장	제프 세션스 (Jeff Sessions) 상원의원	댄 코츠 (Dan Coats) 前 상원의원	로버트 라이시저 (Robert Lighthizer) 변호사	
보건복지장관	에너지장관	국방장관	환경보호청장	예산관리국	
톰 프라이스 (Tom Price) 하원의원	릭 페리 (Rick Perry) 前 텍사스 주지사	제임스 매티스 (James N. Mattis) 前 사령관	스콧 프루이트 (Scott Pruitt) 법률가, 정치인	믹 멀버니 (Mick Mulvaney) 하원의원	
교통장관	농무장관	보훈장관			
일레인 차오 (Elaine Chao) 前 노동장관	소니 퍼듀 (Sonny Perdue) 前 조지아 주지사	데이비드 शुल्킨 (David Shulkin) 보훈부 차관			

자료 : CNN, New York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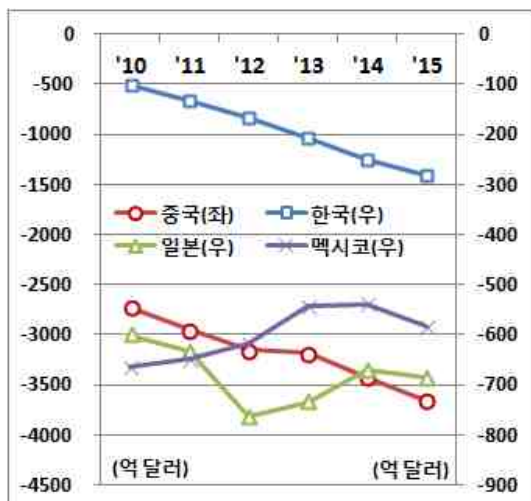
2.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과 보호무역 현황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

○ 미국의 쌍둥이 적자 규모 확대

- 미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 정책의 대상으로 지목된 국가와의 무역적자 비중이 증가
 - 2010년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2015년에는 -7,52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명목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8,373억 달러(2006년)에 근접
 - 이 중 트럼프 당선인이 보호무역의 대상국으로 직접 언급한 중국, 멕시코의 비중이 2010년 53.4%에서 2015년 56.0%로 증가
 - 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 규모는 2015년 -283억 달러로 한미 FTA발효(2012년) 이후에도 매년 증가하는 모습
- 미국의 공공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의 축소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010년대 들어 미국의 공공부채는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20년까지 16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이후 축소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 무역적자 >



자료 : 무역협회.

< 미국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



자료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주 : 2016~2020년은 CBO의 예측치.

○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대상국과의 무역적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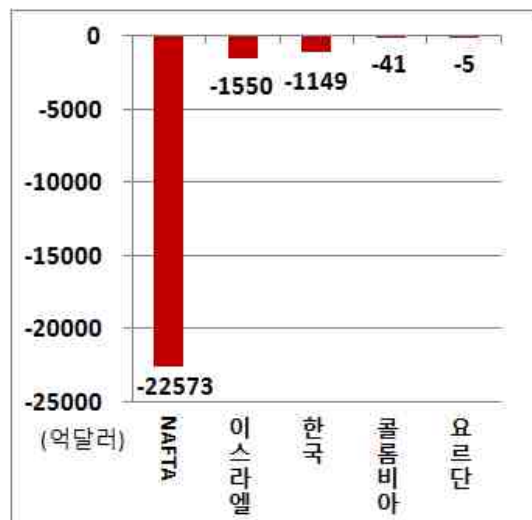
-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14개, 2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 2000년대 이후 세계무역기구의 다자주의 자유무역협상이 지연되자 미국은 지역주의와 쌍무주의적인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 이에 따라 2000년대 이전 2개의 FTA를 체결한 반면, 이후에는 총 12개의 FTA를 체결하고 발효
- 무역수지 측면에서 발효 이후 미국이 손해를 입은 협상은 NAFTA, 이스라엘,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임
 - 2016년 달러가치 기준으로 미국은 NAFTA에서 약 2조 2,500억 달러, 이스라엘FTA에서 1,500억 달러, 한국FTA에서 1,100억 달러의 실질무역수지 적자를 기록¹⁾
 - NAFTA, 한국FTA 등 대규모의 무역적자 확대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발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미국의 FTA 체결 현황 >

체결국	발효시기
이스라엘 FTA	1985.09
NAFTA	1994.01
요르단 FTA	2001.12
싱가포르 FTA	2004.01
칠레FTA	2004.01
호주 FTA	2005.01
모로코 FTA	2006.01
바레인 FTA	2006.08
DR-CAFTA	2009.01
오만 FTA	2009.01
페루 TPA	2009.02
한국 FTA	2012.03
콜롬비아 TPA	2012.05
파나마 TPA	2012.10

자료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FTA 체결 이후 누적 실질무역적자 >



자료 : 무역협회.

- 주 1) 상품에 대한 무역수지로 서비스수지는 고려되지 않음.
2)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 실질화.

1) 본 계산은 FTA 체결 이후 미국이 상대국과의 실질무역적자를 단순히 합친 금액으로 미국이 입은 순수한 FTA 피해를 의미하지 않으며,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확대는 글로벌 분업구조, 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유의.

○ 미국의 자유무역 추진과 환율조작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감소

- 미국은 환율조작국 평가,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
 - 미국은 2016년 2월 '교역촉진법'을 발효하면서 대미무역수지 흑자,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환율시장 개입 등의 지표를 통해 환율 조작국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
 - 2016년 10월 환율 조작국 평가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
 - 환율조작국 평가뿐만 아니라 철강, 가전 등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 규제도 확대
- 미국 노동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과 노동시장참가율이 함께 낮아지는 현상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도 크게 감소
 - 노동시장참가율의 감소는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의 의미하기 때문에 2010년 이후 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 미국 대통령경제자문 보고서(2016)에 따르면 노동시장참가율의 감소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경기 사이클 효과가 약 60%를 설명한다고 분석
 - 그러나 2008년 이후 제조업의 일자리가 약 145만 개 감소하여 제조업부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존재

< 환율조작국 평가 결과('16.10) >

국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대비 3%초과)	환율시장 일방향 개입 (GDP대비 순매입비중 2%초과) ²⁾
중국 ³⁾	3561억달러	2.4%	-5.1%
한국	302억달러	7.9%	-1.8%
독일	711억달러	2.4%	-
일본	676억달러	3.7%	0.0%
대만	136억달러	14.8%	2.5%
스위스	129억달러	10.0%	9.1%

자료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주 : 3개 요건 모두 충족시 '심층분석국',
 2개 요건 충족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미국의 노동시장 현황 >



자료 : U.S. Department of Labor.

2) GDP의 2%이상 달러를 순매수해 자국통화 가치 하락 유도.

3) 미 재무부는 한번 관찰대상국이 된 국가의 경우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두 번 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함.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4월 관찰대상국이 된 중국은 10월 발표에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2) 미국의 對세계 및 중국,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현황

○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 조치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전체 미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 중 80% 이상이 중국과 한국에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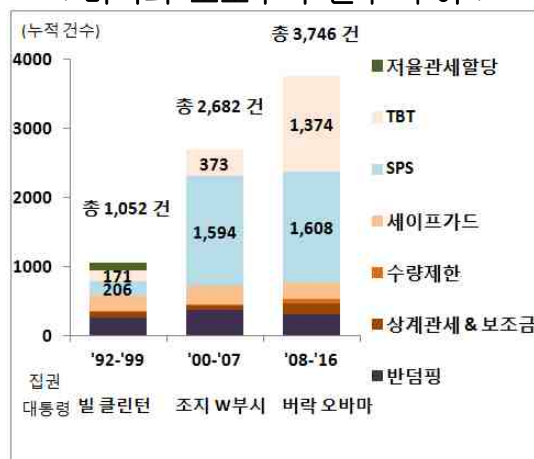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중 70% 이상이 위생 및 검역(SPS)와 기술장벽(TBT)에 집중

- 미국의 對세계 무역보호 조치는 클린턴 대통령 시기(1992~1999년) 1,052건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기(2008~2016년) 3,746건으로 약 3.5배 증가
- 특히 기술장벽(TBT) 부분의 조치는 조지W부시 대통령 시기(2000~2007년)에 373건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기(2008~2016년) 1,374건으로 크게 증가
- 2008~2016년 기준으로 전체 보호무역 조치 중 위생 및 검역(SPS)와 기술장벽(TBT) 조치는 각각 36.6%, 42.9%를 차지

- 오바마 대통령 시기(2008~2016년) 미국의 對세계 보호무역 조치 중 90% 이상이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에 해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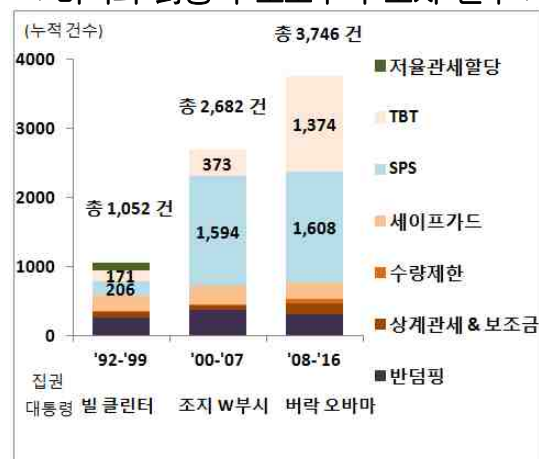
- 미국의 對중국 보호무역 건수는 1992~1999년 789건에서 2008~2016년 3,403건으로 4.3배 증가
- 미국의 對세계 보호무역 조치 중 중국에 해당하는 비중은 1992~1999년 75.0%, 2000~2007년 87.3%, 2008~2016년 90.8%로 증가

< 미국의 보호무역 건수 추이 >



자료 : WTO I-TIP.

< 미국의 對중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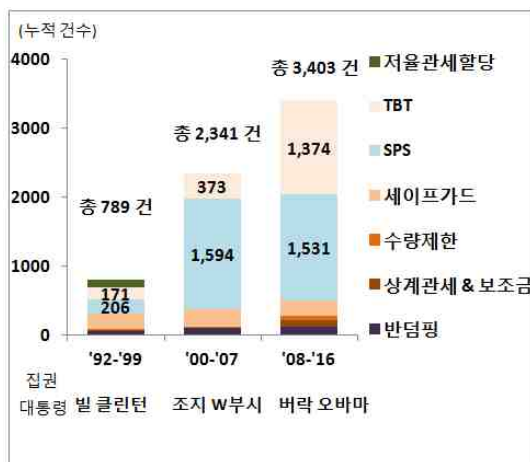


자료 : WTO I-TIP.

4)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되는 보호무역 조치는 1건은 개별 국가 간 제재 건수가 아닌 다자간 제재임.

- 오바마 대통령 시기(2008~2016년) 미국의 對세계 보호무역 조치 중 80% 이상이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에 해당
 - 미국의 對한국 보호무역 건수는 1992~1999년 770건에서 2008~2016년 3,233건으로 4.2배 증가
 - 미국의 對세계 보호무역 건수 중 한국에 해당하는 비중은 1992~1999년 73.2%, 2000~2007년 84.5%, 2008~2016년 86.3%로 증가
- 한국의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⁵⁾을 대상으로 보면 보호무역 조치가 약 20배 이상 증가
 - 1992~1999년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62건에서 2008~2016년 1,274건으로 20.5배 증가
 -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전자기기(HS85, 20.7%), 기계류(HS84, 16.7%) 등의 품목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건수 각각 34.3배, 49.3배 증가
 -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 및 부품과 관련된 품목(HS87, 32.9%)의 경우 약 7.1배 증가⁶⁾

< 미국의 對한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 >



자료 : WTO I-TIP.

< 한국의 對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 대상 보호무역 조치 건수 >

(단위: 건, 배)

품목코드	92-99(B)	08-16(A)	A/B
27	3	53	17.7
29	4	28	7.0
39	4	175	43.8
40	-	102	20.4
72	7	16	2.3
73	4	49	12.3
84	7	345	49.3
85	6	206	34.3
87	23	163	7.1
90	4	137	34.3
합계	62	1,274	20.5

자료 : WTO I-TIP, 한국무역협회.

주 : HS40(고무와 그 제품)은 00~07년 대 미 08~16년 조치 건수 기준.

- 5) 2016년 기준 한국의 對미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은 HS코드 2단위 기준으로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32.9%), 85: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20.7%),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 부분품 (16.7%),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역청 물질 등 (3.6%),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2%), 40: 고무와 그 제품 (2.7%), 73: 철강의 제품(2.7%), 72: 철강 (2.5%), 90: 광학기기, 정밀기기 등(2.0%), 29: 유기화학품 (1.5%)로 對미국 수출의 88.5%를 차지.
- 6) 괄호는 HS 품목 코드 및 각 품목의 2016년 기준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한국의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대부분 기술장벽(TBT) 조치 위주
 - 2008~2016년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건수 1,274건 중 93%인 1,187건이 기술장벽(TBT) 조치
 - 특히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전자기기(HS85), 기계류(HS84), 자동차(HS87) 관련 품목의 기술장벽 조치 건수는 각각 204건, 321건, 154건에 달함

< 2008~2016년 한국의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대한 유형별 보호무역 조치 건수 >

(단위: 건)

품목코드	반덤핑	상계관세	수량제한	SPS	TBT	합계
27	-	-	8	-	45	53
29	-	-	12	2	14	28
39	-	-	4	2	169	175
40	-	-	-	1	101	102
72	8	5	-	-	3	16
73	7	2	-	-	40	49
84	3	4	-	17	321	345
85	2	-	-	-	204	206
87	-	-	-	9	154	163
90	-	-	-	1	136	137
합계	20	11	24	32	1,187	1,274

자료 : WTO I-TIP.

3.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의 대미 수출 및 대중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미FTA 폐기 및 재협상,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및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강화, 한미FTA 폐기 및 재협상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
- 또한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시킬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 악화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

○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파급영향

- 한미FTA 폐기로 인해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가 사라질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손실액 및 국내 고용에 대한 감소분 전망치를 추정
- 추정 방법 및 주요 가정
 - 2000년 1분기에서 2016년 3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미국GDP, 원/달러 환율, 양국의 상대적 물가수준, FTA 더미 변수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한미FTA가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트럼프 집권기간(2017~2020년) 동안 한미FTA 폐기 및 재협상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가 FTA 발효 이전 수준으로 상승해 FTA에 따르는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가정⁷⁾
 - FTA가 유지될 경우 2017~2020년 대미수출 전망치와 회귀분석에 따른 FTA 효과에 대한 추정 계수를 토대로 FTA 폐기시 예상되는 손실액을 추정⁸⁾
 - 산출된 손실액과 산업연관표상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해 국내 고용에 대한 감소분을 추정⁹⁾
- 추정 결과 한미FTA 폐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1억 달러, 총고용감소분은 약 12.7만 명으로 추정

7) 한미FTA 발효 이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은 3% 중반으로 추정.

8) 2017~2020년 대미수출 전망치는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

9) 산업연관표를 이용하기 위하여 FTA 폐기에 따른 손실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은 1,200원으로 가정.

- 대미 수출의 연평균 손실액은 4년간 약 32.5억 달러이며, 이는 2016년 기준 대미 수출 665억 달러의 약 4.9%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대미 수출 손실에 따른 연평균 국내 고용 감소분은 3.2만 명으로 2016년 기준 국내 총취업자의 0.1%, 2015년 대비 2016년 취업자 증가분 29.9만 명의 10.7% 수준으로 추정

< 2017~2020년 대미 수출 손실액 및 국내 고용감소분 추정 결과 >

	대미 수출 손실액 추정치	국내 고용 감소분 추정치
2017년	30.9억 달러	3.0만 명
2018년	32.0억 달러	3.1만 명
2019년	33.1억 달러	3.2만 명
2020년	34.2억 달러	3.3만 명
합 계	130.1억 달러	12.7만 명
연평균	32.5억 달러	3.2만 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소수점 2자리 이후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 한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파급영향

-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OECD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 통계(TiVA, Trade in Value-added)를 이용하여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 영향을 추정
 - 부가가치 기준 무역 통계상 중국 수출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2.7%를 이용하여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분을 추정¹⁰⁾
-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하며, 이는 2016년 한국의 대중 수출 1,244억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18.7억 달러 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

10) 부가가치 기준 무역 통계는 서비스 부문이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도와 2016년 한국의 대중 수출, 국내 부가가치 유흥률 등을 이용하여 상품 무역 기준으로 추정.

4. 시사점

- 자국우선주의, 반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취임 후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첫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별도 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위생 및 검역, 기술장벽 등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품질 조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의 자체 검열 시스템을 강화
 - 동시에 불공정 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WTO, FTA 이행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협상 노력이 필요
- 또한 실제 한미FTA가 폐기되거나 재협상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체계를 마련할 필요
 - 한미FTA로 인해 양국간 이익의 불균형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미국내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의 해외유출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한미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자동차, 전자, 기계 등 FTA 재협상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
 - 특히 미국의 환율조작국 대상에 오를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통상을 연계해 총괄적으로 접근할 필요

둘째, 트럼프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

-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극단적 보호무역 정책이 실제 실현될지에 대한 의문 등으로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크게 상승
 - 특히 이러한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에 더해 2017년 중 예상되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
- 외환시장 및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의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
 -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 등 외환시장의 급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리스크 확대에 대비
- 셋째, 한미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 양국 정부, 민간 부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
-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신산업을 제시하는 등 차세대 협력 방안을 제시 등 미래 협력 아젠다를 발굴해야 함
-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 측과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차기 미국 새 정부와의 관계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HRI**

정 민 연구위원 (2072-6220, chungm@hri.co.kr)
조 규 립 연구위원 (2072-6240, jogyurim@hri.co.kr)
오 준 범 선임연구원 (2072-6247, jboh19@hri.co.kr)